

현안과 과제

■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

목 차

■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

Executive Summary	i
1. 조사 개요	1
2.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	2
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	2
②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	4
③ 남북관계 주요 현안	6
④ 대북정책 평가	8
⑤ 북한의 대외관계	10

□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총 괄 : 이 부 형 이 사 대 우 (2072-6306, Leebuh@hri.co.kr)

□ 통일연구센터 : 이 해 정 연 구 위 원 (2072-6226, hjlee@hri.co.kr)

 : 이 용 화 연 구 위 원 (2072-6222, yhlee@hri.co.kr)

Executive Summary

< 요약 >

■ 조사 개요

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.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기로자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 통일·외교·안보 분야의 전문가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

■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

(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의) 전문가의 85.9%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.

(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행보) 전문가의 73.9%는 평창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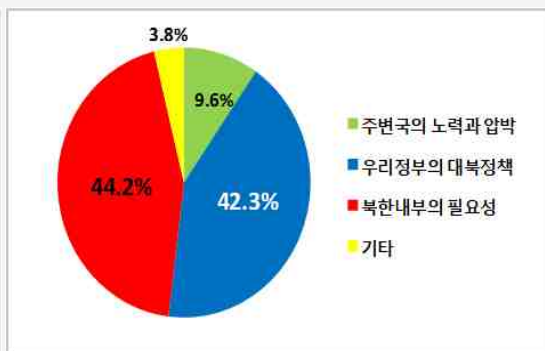
(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 지속을 위한 방식) 보수는 '다자대화'(46.2%)를 통한 관계 개선을, 진보는 '남북 정상회담'(34.4%)을 통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됐다.

(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) 전문가의 56.5%(매우 좋아짐 6.5%+다소 좋아짐 50.0%)가 '좋아질 것'으로 전망했다.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, '북한 내부의 필요성'(44.2%)과 '우리정부의 대북정책'(42.3%)에 기인한다고 응답했다.

<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평가 >



<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 >



②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

(북한 핵·미사일 해법) 전문가의 59.8%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·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언했다.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가 '대북제재 강화'(34.6%)에, 진보는 '대화로 해결'(46.9%)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.

(북한의 도발 가능성) 7차 핵실험에 대해 전문가의 57.6%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,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81.5%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. 한편,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도발(23.9%) 가능성은 낮지만, 사이버공격(67.4%)의 가능성은 높다고 응답했다.

③ 남북관계 주요 현안

(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) 전문가들은 ‘6자회담 재개’(76.1%), ‘금강산관광 재개’(62.0%), ‘개성공단 재가동’(59.8%), ‘5.24조치 해제’(59.8%) 순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. 하지만 정치성향별로는, 5.24조치 해제(진보·중도 70%대 찬성, 보수 42.3% 반대),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(진보·중도 70~80%대 찬성, 보수 50% 반대)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이 나타났다.

(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) 이산가족의 생애 상봉 시한을 고려, 조속한 재개노력(67.4%)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, ‘북한이 반대하면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 없다’(17.4%), ‘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해야 한다’(15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④ 대북정책 평가

(대북정책 평가) 전문가들의 75.0%(아주 잘한다 12.0%+잘하는 편이다 63.0%)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의 절반만 ‘잘한다’고 응답했다.

(신북방정책 평가) 전문가들의 64.1%(크게 기여 7.6%+다소 기여 56.5%)가 신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.

(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)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, 임기 3년 이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.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.8%에 달했다. 정치성향별로는, 진보(96.9%), 중도(88.3%), 보수(65.4%) 순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. 남북정상회담 적정 시기로는 절대 다수인 93.6%(임기 초반 46.2+ 임기 3년 내 47.4%)가 임기 3년 이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.

⑤ 북한의 대외관계

(북미 정상회담 가능성) 전문가의 52.2%(매우 가능성 높음 2.2%+가능성 있음 50.0%)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.

(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) 전문가의 절반 수준이 북미, 북중관계 모두 현상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.

1. 조사 개요

○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고자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

- 조사 시기 : 2018년 1월 26일 ~ 2월 5일 (11日 간)
- 조사 방법 : 설문지 조사
- 조사 대상 : 연구원, 교수,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·외교·안보 전문가 92명
- 조사 내용 :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의,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, 이산가족상봉 재개 가능성,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,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등
- 표본 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±3.08%

<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내용 >

구분	주요 내용
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의 -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행보 - 평창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 - 평창 이후 남북관계 전망
②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 지속에 대한 해법 모색 - 북한의 도발 가능성(핵 실험, 미사일 발사 등)
③ 남북관계 주요 현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.24조치, 개성공단, 금강산관광, 6자회담 -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
④ 대북정책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-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
⑤ 북한의 대외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 전망 -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

2.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

○ (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의) 다수의 전문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

- 전문가의 85.9%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긍정적으로 평가

- “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전문가의 85.9%(매우 도움이 된다 45.7%+도움이 된다 40.2%)가 그렇다고 응답
-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(61.6%)에 비해 진보(100.0%)의 긍정적 평가 비중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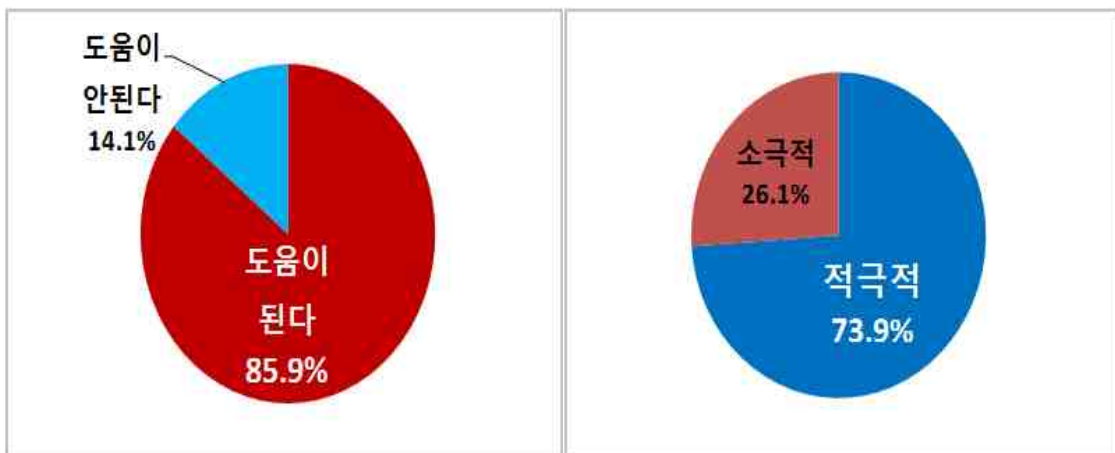
○ (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행보) 전문가의 73.9%는 평창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

- 전문가의 상당수는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

- “북한이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전문가의 73.9%(매우 적극적 9.8%+다소 적극적 64.1%)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
- 정치성향별로는, 진보의 다수(87.5%)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는 반면, 보수(57.7%)는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

<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평가 >

< 평창 이후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>



○ (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 지속을 위한 방식) 보수는 다자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, 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 방식을 선호

- “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대화 지속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보수(46.2%)는 ‘양자 보다는 다자대화’를, 중도(35.3%)는 ‘남북 사회문화 교류’를, 진보는(34.4%) ‘남북 정상회담’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

<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대화 지속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합한 접근 방식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	27.2%	26.9%	35.3%	18.8%
남북 양자 보다는 다자대화로 관계모색	27.2%	46.2%	14.7%	25.0%
남북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으로 확대	26.0%	15.4%	26.5%	34.4%
민간 경제협력 등 민간 교류를 매개로 확대	19.6%	11.5%	23.5%	21.9%

○ (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) 전문가의 절반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고, 이는 ‘북한의 필요성’과 ‘우리정부의 대북정책’에 기인한다고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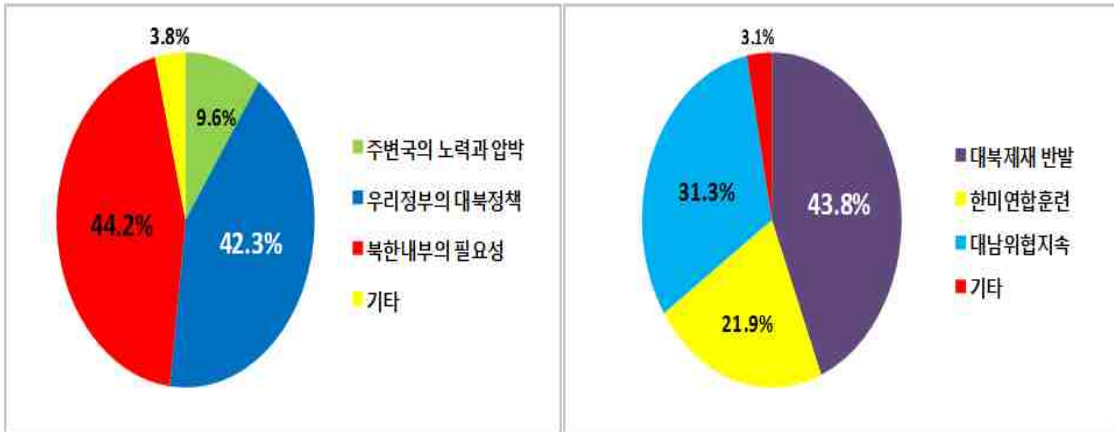
- “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56.5%(매우 좋아짐 6.5%+다소 좋아짐 50.0%)가 ‘좋아질 것’으로 전망
 · 다음으로 ‘현 수준 유지’(23.9%), ‘나빠질 것’(19.6%) 순으로 응답되었고, 정치 성향별로는 ‘다소 좋아질 것’이라는 의견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

<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매우 좋아짐	6.5%	7.7%	5.9%	6.3%
다소 좋아짐	50.0%	34.6%	47.1%	65.6%
현상유지	23.9%	30.8%	26.5%	15.6%
다소 나빠짐	16.3%	26.9%	11.8%	12.5%
매우 나빠짐	3.3%	0.0%	8.8%	0.0%

- '좋아질 것'으로 응답한 전문가들은 '북한 내부의 필요성'과 '우리정부의 대북정책'에, '나빠질 것'의 경우는 '대북제재 반발'을 주요 이유로 응답
- '좋아질 것' : '북한 내부의 필요성'(44.2%)과 '우리정부의 대북정책'(42.3%)
- '나빠질 것' : '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반발'(43.8%), '북한의 대남위협 등 긴장 지속'(31.3%) 등을 가장 큰 악화 이유로 응답

<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 > <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 >



주 : '좋아질 것'이라고 응답한 52명.

주 : '나빠질 것'이라고 응답한 18명.

②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

- (북한 핵·미사일 해법)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·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

- 전문가의 59.8%가 북한 핵·미사일 해법에 대화·제재 병행 방식을 강조
- “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 지속에 대한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'대화·제재 병행'이 59.8%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'대화로 해결'(27.2%), '대북제재 강화'(13.0%) 순으로 응답
-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가 '대북제재 강화'(34.6%)에, 진보는 '대화로 해결'(46.9%)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

< 북한 핵·미사일 해법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대화·제재 병행	59.8%	61.5%	67.6%	50.0%
대화로 해결	27.2%	3.8%	26.5%	46.9%
대북제재 강화	13.0%	34.6%	5.9%	3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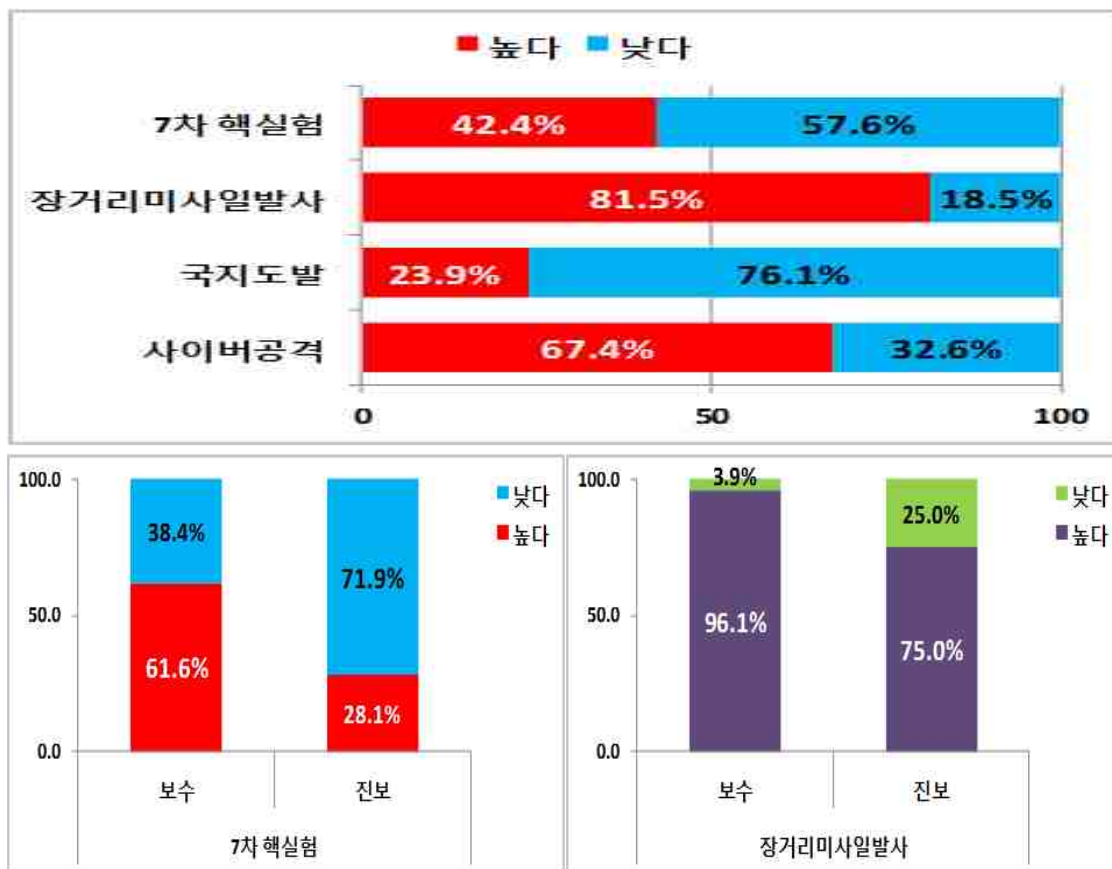
○ (북한의 도발 가능성)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했고, 다음으로 사이버공격, 7차 핵실험, 국지도발 순으로 응답

- “최근 남북대화 재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다음 각각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

- 7차 핵실험 :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전문가의 과반 이상인 57.6%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,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이보다 낮은 42.4%임
- 장거리 미사일 발사 : 전문가의 다수인 81.5%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
- 국지도발 :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의 상당수인 76.1%가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
- 사이버 공격 : 전문가의 67.4%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

- 정치성향별로는, 7차 핵실험에 대해 보수가 진보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, 장거리미사일은 보수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

< 북한의 도발 가능성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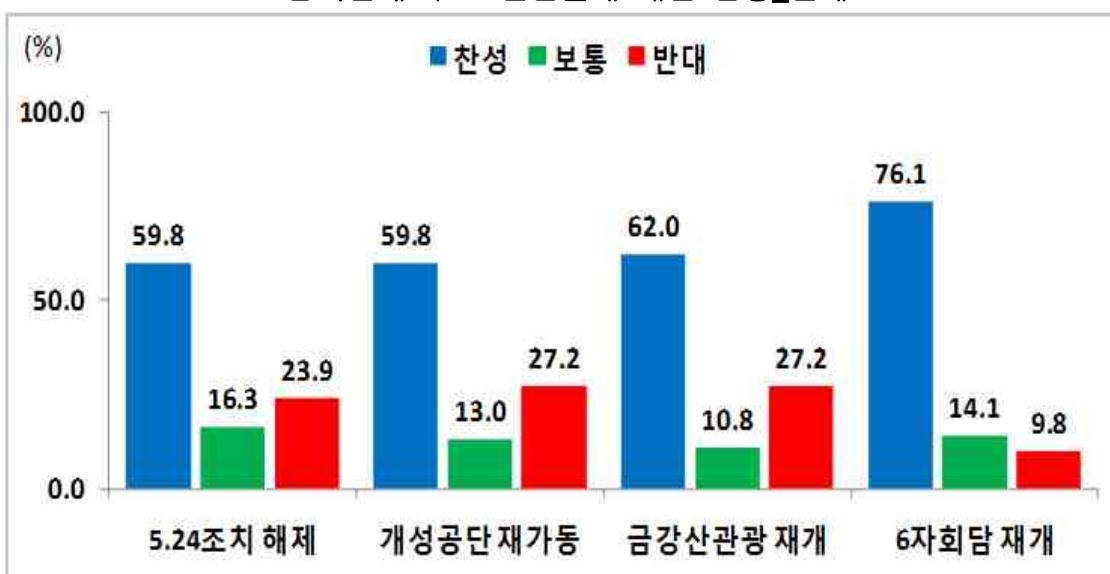
③ 남북관계 주요 현안

○ (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) 대부분 찬성의 의견이 많았으나, 5.24 조치 해제, 개성공단 재가동, 금강산관광 재개는 성향별 차이가 뚜렷함

- “다음은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들입니다.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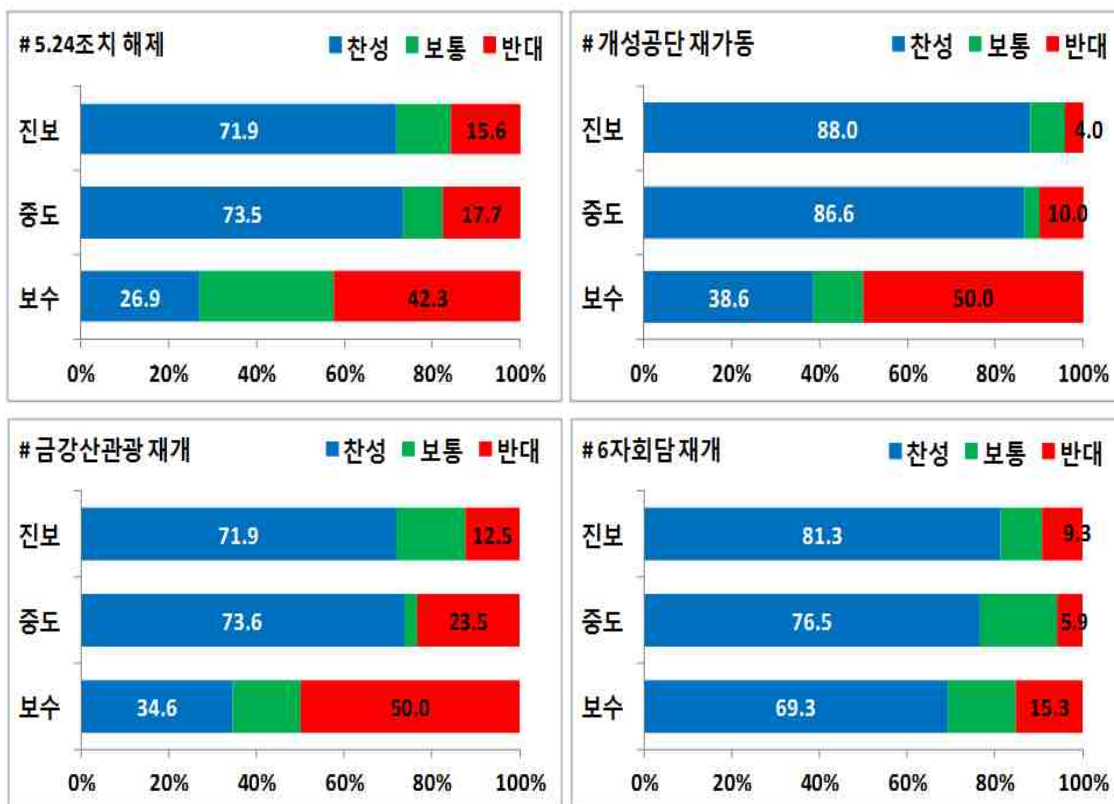
- 5.24조치 해제 : 찬성(59.8%)→반대(23.9%)→보통(16.3%) 순으로 응답
- 개성공단 재가동 : 찬성(59.8%)→반대(27.2%)→보통(13.0%) 순으로 응답
- 금강산관광 재개 : 찬성(62.0%)→반대(27.2%)→보통(10.8%) 순으로 응답
- 6자회담 재개 : 찬성(76.1%)→보통(14.1%)→반대(9.8%) 순으로 응답

< 남북관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_전체 >



-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찬성 의견이었으나, 5.24 조치 해제, 개성공단 재가동, 금강산관광 재개는 정치성향별 차이가 분명
- 5.24조치 해제 : 진보와 중도는 각각 71.9%, 73.5%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찬성 의견이었으나, 보수는 42.3%가 반대 의견을 내비침
- 개성공단 재가동, 금강산관광 재개 : 진보와 중도는 70~80% 수준으로 찬성의 의견이었으나, 보수는 각 사안에 대해 50%가 반대의 의견
- 6자회담 재개 : 모든 정치성향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찬성의 의견

< 남북관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_정치성향별 >



○ (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) 이산가족의 생애 상봉 시한을 고려, 조속한 재개노력이 필요

- 전문가의 상당수인 67.4%는 고령의 이산가족을 고려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

- “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67.4%가 ‘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’에 응답
- 다음으로 ‘북한이 반대하면無理해서 추진할 필요 없다’(17.4%), ‘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’(15.2%) 수준으로 응답

<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고령의 이산가족 고려, 정치적 상황 무관하게 재개노력 필요	67.4%	50.0%	73.5%	75.0%
북한 반대 시,無理하게 추진할 필요 없음	17.4%	30.8%	11.8%	12.5%
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	15.2%	19.2%	14.7%	12.5%

④ 대북정책 평가

○ (대북정책 평가) 전문가들의 75.0%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

- 전체 92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다수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한다고 응답
 - “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들의 다수인 75.0%(아주 잘한다 12.0%+잘하는 편이다 63.0%)가 ‘잘한다’고 평가
 -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가 ‘잘한다’와 ‘잘못한다’의 비중이 각각 50.0%로 응답

<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아주 잘한다	12.0%	11.5%	11.8%	12.5%
잘하는 편이다	63.0%	38.5%	67.7%	78.1%
잘못하는 편이다	19.6%	34.6%	17.6%	9.4%
아주 잘못한다	5.4%	15.4%	2.9%	0.0%

○ (신북방정책 평가) 전문가들의 64.1%가 신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

- 전문가의 과반 이상은 신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
 - “정부는 한반도 평화안정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시했습니다. 신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들의 64.1%(크게 기여 7.6%+다소 기여 56.5%)가 ‘기여할 것’이라고 평가
 - 정치성향별로는, 진보나 중도에 비해 보수가 비관적으로 응답

< 신북방정책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여도 평가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크게 기여할 것	7.6%	7.7%	5.9%	9.4%
다소 기여할 것	56.5%	38.5%	61.8%	65.6%
별로 기여 못할 것	33.7%	50.0%	32.3%	21.9%
매우 기여 못할 것	2.2%	3.8%	0.0%	3.1%

○ (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)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임기 내 필요하다는 입장

-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.8%(매우필요 55.5+다소필요 29.3%)에 달함
 - “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 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다수인 84.8%가 필요하다고 응답
 - 정치성향별로는, 진보(96.9%), 중도(88.3%), 보수(65.4%) 순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

<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매우 필요	55.5%	30.8%	58.9%	71.9%
다소 필요	29.3%	34.6%	29.4%	25.0%
별로 필요 없다	10.9%	26.9%	8.8%	0.0%
전혀 필요 없다	4.3%	7.7%	2.9%	3.1%

○ (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) 임기 3년 이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

-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78명의 응답자 가운데 절대 다수인 93.6%(임기 초반 46.2+ 임기 3년 내 47.4%)가 임기 3년 이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
 -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에 한해 “남북정상회담을 언제쯤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‘임기 3년 내’(47.4%), ‘임기 초반’(46.2%), ‘임기 말’(2.6%) 수준으로 응답
 - 기타 의견으로는 ‘주변국 동의를 통해 분위기 조성 후’, ‘재임기간 중 어느 때라도’, ‘최대한 빨리’ 등으로 응답

< 남북정상회담 시기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임기 초반	46.2%	17.6%	46.7%	61.3%
임기 3년 내	47.4%	70.6%	46.7%	35.5%
임기 말	2.6%	5.9%	3.3%	0.0%
기타	3.8%	5.9%	3.3%	3.2%

⑤ 북한의 대외관계

○ (북미 정상회담 가능성) 전문가의 52.2%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

- “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절반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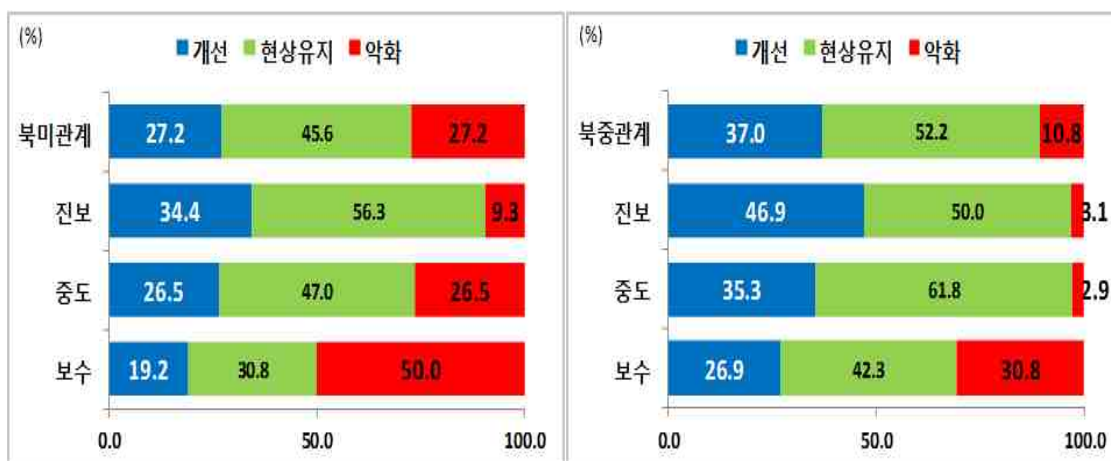
<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매우 가능성 높음	2.2%	3.8%	0.0%	3.1%
가능성 있음	50.0%	34.6%	58.8%	53.2%
가능성 없음	40.2%	46.2%	35.3%	40.6%
매우 가능성 없음	7.6%	15.4%	5.9%	3.1%

○ (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) 전문가의 절반 수준이 북미, 북중관계 모두 현상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- “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보수의 의견이 다른 성향에 비해 비관적으로 응답

<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 개선 전망 >



이해정 연구위원 (2072-6226, hjlee@hri.co.kr)
 이용화 연구위원 (2072-6222, yhlee@hri.co.kr)